

16.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2월 28일
- 발의의원 : 홍인표 · 강성환 · 김성태 · 박갑상 · 이만규 · 이시복 ·  
장상수 · 전경원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3월 4일
- 상정일자 :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9년 3월 19일),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홍인표 의원)

### ☐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규정과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의무 근거를 마련하여 적절한 시설활용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올바른 충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정비 (안 제11조)
- 충전시설 설치비율 정비 (안 제11조의3)
- 과태료부과기준 표시규정 신설 (안 제11조의5)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재규)

## □ 개정취지

- 기술개발 및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충전시설 설치 수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설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법령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람직한 충전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 □ 적법성 여부

-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안에 있는 별표의 내용 중 일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충전 시설 의무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여 간소화 하려는 것임.
- 안 제11조의3(충전시설 설치비율)은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조항의 주제에 맞게 순서를 정비하고, 완속충전시설 대비 급속충전시설의 성능과 차량 멀티 충전이 가능한 시설이 출시된 상황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한 충전기 설치수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급속충전시설 1기와 완속충전시설 7기는 전기용량이 유사하여

일정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동일하고, 최근 1기의 충전시설로 2기 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장비가 출시되고 있어 주차장 공간활용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1> 충전시간(완속, 급속)

- 7kW 완속충전기 : 1시간에 7kWh 충전 가능

예)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의 경우 완전충전까지 소요시간

$$= (28\text{kWh} / 7\text{kWh}) \times 60\text{분} = 240\text{분} (4\text{시간})$$

- 50kW 급속충전기 : 1시간에 50kWh 충전 가능

예)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의 경우 완전충전까지 소요시간

$$= (28\text{kWh} / 50\text{kWh}) \times 60\text{분} = 33.6\text{분}$$

- 100kW 급속충전기 : 1시간에 100kWh 충전 가능

예)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의 경우 완전충전까지 소요시간

$$= (28\text{kWh} / 100\text{kWh}) \times 60\text{분} = 16.8\text{분}$$

<참고2> 광역시·도별 충전기 설치 현황

(단위 : 기)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58	288	481	246	225	128	137	49	1,410	451	293	285	273	408	451	455	876
급속	300	83	206	90	79	50	71	21	556	302	183	172	165	253	300	246	395
완속	658	205	275	156	146	78	66	28	854	149	110	113	108	155	151	209	481

<참고3> 충전기 설치비용

(단위 : 천원)

종 류	합 계	본 체	부대비용	비 고
급속충전기	47,500	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시설(케노피) : 4,500</li> <li>· 설치비 : 1,500</li> <li>· 전기공사 : 12,000</li> <li>· 한전시설부담금 : 4,500</li> </ul>	현장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완속충전기	9,830	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시설(케노피) : 1,500</li> <li>· 설치비 : 500</li> <li>· 전기공사 : 3,500</li> <li>· 한전시설부담금 : 430</li> </ul>	”

○ 안 제11조의5(과태료 부과기준 표시)의 신설은 2018년 9월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충전 방해 행위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충전시설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충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간소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적의 충전시설과 수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요건 충족에 국한하지 말고 현장의 제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는 최신 기능의 급속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비예산 확보 및 기술개발 투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전기차 충전소 내 갈등 문제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건전한 충전 에티켓’을 지키는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 최근 ‘충전갈등’관련 보도

- 전기차 충전소 부족에 시민들 갈등도 커져...<대전일보 2019.01.22.>
- 전기차 충전하려다 살인미수까지...제주서 ‘충전 갈등’ 심각...<연합뉴스 2019.01.04.>
- 아파트 내 ‘충전기 설치’갈등...눈치밥 먹는 ‘전기차’...<JTBC 2018.12.03.>

○ 아울러, 지역 중심가 주차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충전 시설에 상응하는 주차구획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전기차 충전만을 위한 전용 충전스테이션, 기존 주유소를 개조한 하이브리드형 충전소 등을 설립하여 충전인프라 구축과 주차공간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계획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휴대폰처럼 급속충전기 사용으로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 경우가 없는지?	○ 수명단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에서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향후에, 충전기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기술개발로 급속과 완속충전의 의미가 사라질 텐데 충전비율을 너무 디테일하게 정해 놓으면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현재 충전기 설치 의무비율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